

“광주천은 광주의 젓줄... 오늘처럼 항상 푸르르길”

‘2024 광주천 클린워킹대회’ 성료
단체·가족·학생 등 160여명 참가
두물머리 출발...2개 코스로 운영
걷기 운동과 함께 환경정화 활동

청명한 가을하늘 아래 선선한 바람이 불어온 주말 아침. 광주천 두물머리 일대에는 환경 정화를 하기 위한 지역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시민들은 ‘생태힐링 광주천을 지켜내자’고 다짐하며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전남일보가 주최·주관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주시, 동·서·남·북·광산구, 블랙야크가 후원한 ‘2024 광주천 생태힐링벨트 클린워킹대회’가 지난 12일 오전 광주 북구 임동 광주천 두물머리 일대에서 성료됐다.

‘클린워킹’이란 ‘Cleaning(정소)’과 ‘Walking(걷기)’의 합성어로, 이번 2024 광주천 생태힐링벨트 한마음 클린워킹대회는 “생태힐링벨트 광주천! 걷GO! 줍GO!”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됐다.

지난 2021년 시작돼 올해 4회째를 맞이한 이날 행사에는 김기중 전남일보 사업본부장과 문인 북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을 비롯해 △숲사랑물사랑환경대학 △바르게살기운동 광주협의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광주지부 △한국부인회 광주지부 등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와 가족과 학생 등 160여명이 참가했다.

본격적인 대회 시작에 앞서 이재욱 전남일보 사장을 대신한 김기중 사업본부장의 인사말과 문인 북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김기중 본부장은 “광주와 자치구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광주천 일대가 큰 발전을 이뤄냈다. 전남일보는 광주천의 의미와 가치를 시민들과 함께 되새기고자, 지난 2021년부터 매년 클린워킹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가을의 정취를 느끼며, 광주천의 소중한 물소 체험·공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인 광주 북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백기영 숲사랑물사랑환경대학 대표, 이석우 바르게살기운동 광주협의회장, 오수명 특수임무유공자회 광주지부장, 김정숙 한국부인회 광주지부장, 김기중 전남일보 사업본부장과 시민 등이 지난 12일 광주 북구 광주천 두물머리 일대에서 전남일보 주최·주관으로 열린 2024광주천 생태힐링벨트 클린워킹 대회에서 깨끗한 광주천 만들기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2024 광주천 생태힐링벨트 클린워킹대회’ 참가자들이 지난 12일 광주천 일대에서 환경정화활동을 하고 있다.

문인 북구청장은 “매년 전남일보에서 ‘광주의 젓줄’인 광주천의 생태보호를 위한 행사를 추진해 오는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행사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열정이 우리의 광주천을 더욱 빛나게 한다. 건강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대회를 즐기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병내남구청장은 “광주천의 쓰레기를 주우면서, 건강도 챙기는 의미 있는 행사에 참여하게 돼 영광이다”며 “바쁜 와중에도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뜻깊은 활동에 동참한 단체와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대회는 두물머리에서 출발해 광주교로 이어지는 상류 순환코스와 상무교로 이어지는 하류 순환코스

등 2개 코스로 나눠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한 손에는 집게를, 한 손에는 자루를 들고 ‘광주천을 사랑하자. 광주천을 지키자’는 구호를 외치며 각자 천변길을 따라 발걸음을 옮겼다.

초대 대회부터 매년 클린워킹 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숲사랑물사랑환경대학은 이날 65명의 회원이 함께 해 가장 많은 참여인원을 자랑했다.

백기영 숲사랑물사랑환경대학 대표는 “광주는 여러 도시 중에서도 폭염 등 이상 기후 현상이 심각한 지역이지만, 에코벨트 조성 관리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전남일보가 매년 각종 환경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홍보해 지자체와 시민들의 관심을

끌어내고 있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자연 문제에 대한 많은 관심과 환경 보전을 위한 많은 동참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천 물줄기처럼 푸른색의 조끼를 맞춰 입은 바르게살기운동 광주협의회 회원들은 삼삼오오 줄을 지어 걷다 쓰레기를 발견하면 놓치지 않고 재빨리 달려가 쓰레기를 주워 담았다.

이석우 바르게살기운동 광주협의회장은 “수차례의 클린워킹 행사를 통해서 우리의 광주천이 정말 깨끗해졌고, 광주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됐다”며 “뜻깊은 행사에 회원들과 함께해 기쁘다. 살기 좋은 지구, 탄소 없는 광주 만들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검은 전투복을 갖춰 입은 특수임무유공자회 광주지부 회원들은 수풀이 우거진 곳도 아랑곳하지 않고 들어가 각종 쓰레기를 끄집어 냈다.

오수명 특수임무유공자회 광주지부장은 “과거 특수임무 수행을 위해 받은 훈련 경력을 살려 광주의 하천과 저수지 등 수중 환경 정화 활동을 위해 회원들과 함께 노력해오고 있다”며 “강인한 체력과 특화된 기술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여성들로만 이뤄진 한국부인회 회원들

도 바쁘게 천변을 돌아다니며, 쓰레기를 자루 가득히 채웠다.

김정숙 한국부인회 광주지부장은 “평소 부인회가 기후변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 매년 클린워킹대회를 비롯한 다양한 환경봉사를 펼치고 있다”며 “오늘 회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활동에 참여했다. ‘탄소제로 광주’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동참하겠다”고 다짐했다.

가족, 지인들과 손을 잡고 천변을 걷는 개인단위 봉사자들도 눈에 띄었다.

전남일보의 오랜 구독자라고 밝힌 박신철(47)씨는 “전남일보 지면 광고를 보고, 초등생 자녀들과 의미 있는 주말을 보내고 싶어 봉사활동을 신청했다”면서 “날씨도 좋고 가족들과 좋은 추억을 쌓게 돼 기쁘다. 앞으로도 많은 광주천과 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겠다”며 미소를 지었다.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송승관(23)씨는 “광주천이 생각보다 너무 깨끗해서 오늘 쓰레기를 많이 줍지는 못했다”며 “가을 하늘처럼 푸르른 광주천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다. 항상 오늘처럼 깨끗한 모습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실천하겠다”고 당차게 말했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노동권리 구제 서비스도 지방소멸... “처우 현실화 나서야”

광주·목포지청 소속 노무사 0'

고용노동부의 전국 지방청·지청 33곳 중 10곳에서 공인노무사를 한 명도 채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속 노무사가 한 명도 없는 지방청·지청 10곳 중 2곳이 광주지방청과 목포청으로 확인돼 노동권리 구제 서비스조차 지방소멸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김위상 국민의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고용노동부 지방청 6곳, 지청 27곳(출장소 1곳 포함) 중 10곳에서 권리구제지원팀

공인노무사를 한 명도 뽑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소속 노무사가 한 명도 없는 지방청·지청은 △대구지방청(정원 2인) △광주지방청(정원 1인) △대구서부지청(정원 2인) △창원지청(정원 1인) △울산지청(정원 1인) △양산지청(정원 1인) △포항청(정원 1인) △구미청(정원 1인) △목포청(정원 1인) △군산청(정원 1인)으로, 호남 3곳, 영남 7곳이었다.

특히 권리구제지원팀 노무사 임금이 민간(노무사)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채용 및 장기근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권리구제지원팀 노무사의 월 기본급은 256만원으로

민간 노무사의 중위임금인 월 423만원의 60%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비수도권의 경우 수도권 선호 현상으로 채용공고에도 지원자가 없고, 임금 인상 또한 권리구제지원팀 소속 노무사는 공무원 근로조건을 적용받기 때문에 별도 임금 인상이나 수당 신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위상 의원은 “각 지방청, 지청 소속 노무사의 소멸로 인한 피해는 지역 노동자에게 돌아간다”면서 “각 지방 채용 여건을 고려해 처우 현실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찬 기자

5·18기념재단, ‘노태우 비자금’ 검찰 고발

부인·아들·딸... 900억 은닉 혐의

5·18기념재단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된 의혹과 진술 등을 토대로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부정부패 은닉재산과 관련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순씨와 아들 노재한·딸 노소영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13일 밝혔다.

재단은 범피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사유로 오늘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들은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상속받은 자산 900억여 원을 차명으로 보관하거나 대여금, 투자금 형식의 채권, 금고 등에

은닉해온 의혹을 받고 있다.

또 해당 재산을 상속받고도 이를 숨기고 국가에 환수당하지 않기 위해 과세관청에 신고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상속세를 포탈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재단 관계자는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우자 김옥순 씨가 210억에 이르는 비자금을 차명으로 보관하다가 다시 한번 보험금으로 납입해 자금 세탁한 사실이 드러났고 노소영 씨와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가족이 904억원의 자금을 차명으로 보관한 사실도 드러났다”며 “피고발인들의 신병 확보를 위한 출금 금지 등 조치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민현기 기자

영광군수 사전투표기간 ‘유권자 나르기’ 신고 잇따라

영광군수 재선거 사전투표가 지난 12일 마무리된 가운데, 투표기간동안 ‘유권자 실어나르기’ 정황을 포착했다는 신고

가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13일 영광경찰에 따르면 사전투표가 시작된 지난 11일 오전 영광 백수읍에서

한 차량으로 유권자 5명을 사전투표소로 실어 날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신고와 함께 제보된 동영상 등을 바탕으로 차량 운전자를 추적하는 한편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이송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앞서 같은날 오전 군남면의

한 마을회관에서 광주에 거주하는 특정 정당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머무르며 차량으로 유권자 2명을 수송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유권자 실어나르기 의혹 문이 잇따랐다. 영광선관위에

따르면 사전투표기간 동안 선관위에는 수차례의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아직 고발 사례는 없지만, 선관위는 신고 내용 등을 바탕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파악될 경우 철저히 고발조치한다는 입장이다. 윤준명 기자